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살펴보는 도덕과 사회에 대한 우리 생각의 패턴들

성기진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보통 인문학 책은 거의 팔리질 않는다. 천 권 팔리면 많이 팔린 거고, 만 권 팔리면 진짜 많이 팔린 거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마이클 샌델 (Michael Sandel)이라는 하버드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원제: Justice: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라는 책은 국내에 번역 출판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더니 무려 150만 권이나 팔리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샌델을 초청해서 내한공연(?)도 했고, 강의에도 수천 명이 몰려와서 장사진을 쳤다.

샌델이 불러일으킨 ‘인문학 열풍’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덕분에 평소에는 서점 구석에서 먼지만 쌓이던 철학, 사회학, 정치학 책들이 한국인의 일상에 조금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단지 입시 열풍이나 대기업 취업 경쟁률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인문학 공부가 입시나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 정의라는 개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의(正義)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가정과 교실, 일터에서부터 국내외 정치 현안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 질문이다. 누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지, 누가 무엇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¹⁾ 그래서 샌델도 추상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미국 사회

1) 현대 사회에서 “정의”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는 재화와 특권, 권리와 의무, 행복, 자원, 의료혜택 등을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빈부격차는 어디까지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도자의 자리를 비롯한 사회의 주요 직위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는가? 등을 묻는다. 우리 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빈부격차가 급격히 심해지면서 분배 정의에 목말라 있다. 둘째, 응보 정의(retributive justice)는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어떤 종류의 죄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가? 어떤 경우에 처벌을 감면해 줄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는 것이 응보 정의의 핵심이다.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응보 정의에도 목말라 있다. 셋째, 회복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분배 정의나 응보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바람직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예를 들면 전쟁을 일으켰거나 다른 민족을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금



이 문서는 라브리공동체 웹사이트 자료실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있으며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및 소장 배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the online library of L'Abri Fellowship Korea. All copyright belongs to the author. Printing, copying and small-scale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personal and group study.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라브리공동체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3025
☎ (+82) 033-673-0037 ✉ yangyang@labri.kr

www.labri.kr

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들의 예를 들어 정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설명 방식은 철학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도 쉽게 정의라는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그러나 “정의”라는 주제를 처음 접하는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샌델의 책에는 몇 가지 심각한 단점도 있다.

첫째는 여러 가지 정치철학 이론들을 둘러보기만 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지 않아서,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럴듯한 답을 얻고 싶었던 독자라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철학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소개할 때 종종 일어나는 현상으로, 저자 자신도 아직 답을 찾아가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뜻 남에게 말해주기 곤란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철학자 자신은 정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을지 몰라도, 독자의 입장에서 기대치와 달라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델 자신이 선호하는 공동체주의 이론 쪽으로 은근히 기울어진 논지를 편다는 점이다. 명확하게 “이것은 옳고 다른 것은 틀리다”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이론의 단점은 꼼꼼하게 분석하면서도 자신이 선호하는 이론의 가장 심각한 단점은 대강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식이다. 이 때문에 샌델의 책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종종 받고 있다.

셋째는 샌델이 예로 드는 미국 사회의 이슈들이 한국 독자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는 성윤리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보수적인 편이고, 인종 차별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거나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오히려 부추기고 있으며, 분단국가의 특성상 전쟁에 대한 태도도 미국과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정치철학 이론을 어떤 이슈에 적용했을 때 나오는 결론들이 하버드 학생들에게는 옳게 보이더라도 평범한 한국인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이론에 대한 평가마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네 가지 정치철학 이론, 네 가지 생각의 패턴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샌델의 논지를 그대로 소개하기보다는 애초에 우리가 <정의는 무엇인가?>에 열광했던 근본적인 이유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한다.

한국 사회가 정의에 목말라 있는 이유는 정의에 대한 철학 이론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 정의롭고(공평하고) 어떤 것이 정의롭지 못한지(공평하지 않은지)에 대한 직관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일상에서 겪고 뉴스를 통해 접하는 현상들이 정의에 대한 이런 생각들과 어긋나면 사회에 정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철학 이론을 알지 못하더라

을 지급하는 것, 편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 등이 회복 정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분배 정의와 응보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계층 간에 점점 갈등이 깊어만 가고 있어 회복 정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현대 정치철학자들이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분배 정의를 가리키지만, 어떻게 보면 응보 정의나 회복 정의도 사회 구성원들 간에 잘잘못과 책임과 역할을 나누는 문제이므로 폭넓은 의미에서의 분배 정의라고 할 수 있겠다. 샌델도 이렇게 폭넓은 의미로 정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갈망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렇다면 철학 이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철학, 특히 도덕철학은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동떨어진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된다. 대부분의 도덕철학 및 정치철학 이론들은 무엇이 옳고 공평한가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을 가로지르는 패턴들을 찾아 (예: 죄 없는 아이가 아파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단단한 이론으로 발전시키면 (예: 죄 없는 아이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도덕철학이 되고, 도덕철학을 정치에 적용하면 정치철학이 된다.

샌델이 소개하는 네 가지 정치철학 이론들은 우리가 흔히 옳고 그름이나 공평함에 대해 생각할 때 쉽게 떠올리는 네 가지 생각의 패턴들을 정리한 것이다.

1.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좋은 결과를 낳아야 옳은 일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2.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또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자유롭게 선택한 행동이 그렇지 않은 행동보다 더 가치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3. 공평주의(egalitarianism) 또는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는 잘못하지 않은 것 때문에 손해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4.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딱 맞는 역할이 있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어떤 역할을 맡으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일상적인 생각들을 정리하여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을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일관성있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사회 현상을 한두 가지 원칙만으로 모두 설명하거나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정치철학 이론을 이해하는 것만큼 각각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정치철학 이론은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되기 때문이다.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공평주의의 약점은 샌델의 책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샌델이 선호하는 공동체주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비판이 부족하므로 이 강의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보려고 한다.

공리주의(Utilitarianism)

공리주의는 19세기 영국의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등이 주창한 이론이다. 19세기는 현대 과학의 발전에 불이 붙어서 과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학문에 관심이 많아지던 시기이고, 당시 영국은 대영제국의 최고 전성기로 정치적·경제적으로 지금의 미국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누리고 있었다. 이러한 과학의 발전과 경제적 발전의 영향을 받아, 공리주의자들은 윤리에서도 과학과 경제처럼 정확한 예측과 계산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모든 도덕 규범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고, 개인의 품행은 물론

이고 사회, 경제 정치 제도도 모두 이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여기서 행복의 극대화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개념이다. 여러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행복보다 낮고, 같은 사람이라도 많이 행복할 수 있다면 조금 행복한 것보다 낮고, 기왕이면 행복한 것이 고통스러운 것보다 낫다는 얘기다. 정책을 평가할 때는 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복의 총합에서 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행의 총합을 뺀 나머지를 보면 된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덧셈 뺄셈 곱셈만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옳은 일을 할 수 있다. 경제 정책에 적용할 때는 행복과 불행이라는 애매한 판단 기준을 금전적 이익과 손실이라는 숫자로 대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조 원을 들여서 10조 원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면, 2조 원을 들여서 7조 원어치의 사회적 효과를 얻는 것보다 낫고, 같은 비용으로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당연히 낫다는 식이다.

어떤 행동이나 정책의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는 우리나라처럼 급속성장을 이룬 나라들, 지금도 끊임없이 경제 발전을 부르짖는 사회 지도층, 그리고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수치화해야 하는 보험업계 등에서 인기가 있다. 기왕이면 좋은 결과를 많이 얻자는 생각은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이데올로기화하여 모든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공리주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1) 사람이 하는 일에는 늘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라, 우리는 종종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곤 한다. 세금을 낮춰서 해외 자본 10조 원을 유치할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높여서 저소득층에게 1조 원을 지원할 것인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1000만 명의 경상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인가, 아니면 500만 명의 전라도 사람들을 두 배로 행복하게 해 줄 것인가?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으면 이걸 비교할 기준이 필요한데, 누가 감히 사람의 행복을 두고 수학적으로 손익계산(cost-benefit analysis)을 할 수 있을까? 공리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수치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불행을 비교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아무래도 억지라는 인상을 준다.

2) 공리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의 궁극적 기준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다. 그러나 과연 인간이 느끼는 행복이 도덕의 궁극적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저급한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도 옳은 일일까? 만약 옳지 않다면, 저급한 쾌락과 건전한 행복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존 스튜어트 밀은 일반 사람들의 상식적 판단을 기준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때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던 행동들 중 나중에 나쁘다고 밝혀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의 사회에서 상식이라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만을 도덕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사회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3) 공리주의는 훌륭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행복이 발생하였는가만 보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심지어 아주 심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해도 나중에 더 훌륭한 결과를 얻으면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 주식 투자해서 1억쯤 손해봐도 내일 10억 만회하면 문제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다수가 편하게 살기 위해 소수의 인권을 짓밟는 결과를 가져온다. 5천만 국민이 아주 조금씩만이라도 행복을 얻는다면 소수 민족의 고통 정도는 눈감아 줄 수 있고, 5천만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몇 명쯤 굶어죽어도 괜찮다는

논리다. 오직 결과에만 집중하는 공리주의는 다수의 횡포와 전체주의적 탄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짙다.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또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와 달리, 자유지상주의는 어떠한 행동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자유지상주의의 뿌리는 17~18세기에 인기를 끌었던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에서 찾을 수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절대왕정의 폐해를 고발하고 혁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나타난 이론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누구로부터 보호하는가? 옛날에는 자기 맘대로 아무나 죽일 수 있던 왕과 그의 신하들(예: 변사또)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했고, 지금은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독재자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외국의 침략이나 테러범의 공격, 국내의 범죄자들로부터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생명과 재산,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국가가 국민들의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고전적 자유주의의 특징이다. 특히 국가가 경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즉 경제적 규제의 철폐를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신자유주의)를 현대 사회와 철학계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정통 후예로 보고 있다.

1980년대에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 정권 등이 내세웠고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흔히 보수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수주의자들은 마약, 매춘, 중독성 게임 등을 국가가 어느 정도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자유지상주의 철학자들과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함구하거나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로 취급한다. 즉, 경제에 대해서만 보수와 입장을 같이한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부자들이 낸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부자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유명한 주장을 했다. 소득의 일부를 강제로 걷어가는 것은 노동력의 일부를 강제로 동원하는 것과 똑같다는 논리이다. 노직의 주장에 따르면,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는 국가 아래에서 국민들 간에 협박이나 속임수 없이 자유롭게 거래한 결과라면 아무리 불평등하더라도 정의롭다. 반면, 아무리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졌더라도 개개인의 선택에 반하여 얻은 결과라면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

자유지상주의는 공리주의가 전혀 관심갖지 않는 자유, 선택, 인권의 문제를 강조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정의롭지 않을 수 있다는 발상은 공리주의자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 속에도 자유로운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분명 있다. 비난받지 않으려고, 마케팅 효과를 얻으려고, 또는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억지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보다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더 칭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반면, 자유로운 선택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지상주의는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신자유주의가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1)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협박이나 속임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가? 예: 통신사들이 담합하여 핸드폰 요금을 비싸게 받아서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지 않으면 학교에서 왕따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샀다면? 어딜 가나 똑같은 요금제, 똑같은 메이커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자유지상주의가 생각하는 자유와 달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는 단지 협박이나 속임수가 없는 상황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2) 협박이나 속임수가 없는 거래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性)을 사고팔고, 장기를 사고팔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밀실에서 담합하는 것도 자유롭게 허가해야 하는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의 양심에 맡기자고 하고,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린다.

중간 정리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는 극단적인 예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아래의 두 가지를 모두 기준으로 삼는데,

1. 자발적인 선택이었는가? (역지로 한 일은 그다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2. 결과가 좋았는가? (아무리 좋은 의도였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곤란하다.)

둘 중 한 가지만을 강조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를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공평주의(Egalitarianism) 또는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공평주의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탄탄한 복지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철학으로,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사실상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을 떠받치고 있는 이론이다. 샌델의 책에 등장하는 공평주의라는 이름은 “정의는 공평한 것”(justice as fairness)이라고 주장한 미국의 철학자 존 롤즈(John Rawls)에게서 나온 말이고, 그 밖에도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일부에서는 그냥 자유주의(liberalism)라고도 부른다.

롤즈는 우리 모두 한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것을 제안한다. 당신이 어떤 사회에 곧 태어날 것이라고 해 보자.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라날지는 알 수 없다. 백인일 수도 있고 흑인일 수도 있고, 부잣집 아들일 수도 있고 매춘부의 딸일 수도 있다. 건강한 운동선수로 자라날 수도 있고, 몸이 허약해 평생 병원에 들락날락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수가 믿는 종교를 받아들일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믿는 종교가 그 사회에서는 가장 억압받고 천대받는 종교일지도 모른다. 자, 만약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야 한다면 당신은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으면 좋겠는가? 그 사회를 지탱하는 원칙이 어떤 것들이어야 “아뿔싸,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롤즈의 아이디어에는 직관적인 매력이 있다. 우리 중 자기 유전자와 가정 환경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한 것”을 최소화하려는 자유지상주의와 달리, 공평주의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의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만약 어떤 유전자와 가정 환경과 맞닥뜨리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만 잘 활용하면 크게 손해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있다면, 그런 세상이야말로 정의로운 세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회의 평등”과 비슷한 개념이다.

롤즈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자기 잘못이 아닌 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 사회가 되려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과 보편적인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 (성, 인종,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받아서 안된다.) 둘째,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자원은 불평등하게 분배해도 좋지만, 불평등을 감수함으로써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조차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롤즈의 두 원칙은 결과를 중시하는 생각과 자유를 중시하는 생각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은 선택과 무관하게 제공되지만, 나머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현대 복지국가의 기초생활수급 제도, 최저임금 제도, 의료보험 제도 등이 모두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다. 생존과 건강에 위협을 받지 않아야 비로소 의미있는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한선을 둬으로써 아무도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원칙을 이해하려면 가장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아야 한다. (당신이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날지도 모르지 않는가?) 가난한 사람이 보기에는 무조건 평등하게 부를 분배하는 것이 당장은 이익이 될지도 모르지만, 시장 경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을 감수하면 자본의 집중을 통해 경제가 더 발전하여 심지어 가장 가난한 사람에도 더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피자 한 판을 똑같이 잘라먹는 “제로섬 게임”에 집착하지 말고, 주방장을 키워서 피자를 더 많이 생산하여 모두 배불리 먹자는 얘기다. 이것이 바로 실패한 공산주의 국가들과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차이이다.

롤즈의 두 번째 원칙은 불평등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불평등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명쾌한 대답을 주고 있다. 불평등은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무리한 투기로 나라 살림을 거덜낸다거나, 사회에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고 자기 뱃속만 채킨다거나,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 재산을 늘린다면 그것은 결코 롤즈의 두 번째 원칙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자유주의 사상의 밑바탕에는 인권이라는 원칙이 깔려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너무 지나쳐서 가난한 사람들이 인권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조차 남지 않는다면 그런 사회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공평주의의 평가이다.

공평주의의 한계, 그리고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공평주의는 꽤 매력이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인권과 최소한의 경제적 조건 충족, 노력에 따른 소득 분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공평주의를 여러 가지로 적용하고 있어 우리에게 친근한 덕분이다. 학계에서도 공평주의의 영향력은 다른 모든 정치철학 이론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평주의의 원칙들을 정립한 롤즈는 20세기 후반 서양 최고의 정치철학자로 추앙을 받았고, 롤즈를 빼놓고는 정치철학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공평주의는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마이클 월저(Michael Walzer), 알래스타어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등의 공동체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공평주의는 선택의 자유와 상식적으로 수긍이 되는 결과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복지,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소득 수준 등 개인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협력, 전통, 상대방에 대한 존중 등 공동체의 덕목을 상실했다고 한다. 즉, 공동체주의는 공평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뭔가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롤즈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당신은 어떤 사회에 태어나고 싶은지 결정할 때 자신의 인종, 성별, 사회적 배경, 종교 등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세운다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원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샌델은 지적한다. 아무런 특색도 없고 어떠한 애착도 없고 오직 손익만 챙기는, 일반적인 익명의 개인이 선호할 만한 원칙이 나온다는 것이다. 심지어 불평등한 경제 체계를 논의할 때도, 그런 불평등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심리적 박탈감이나 사회적 갈등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오직 그것이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손에 푼돈 몇 푼을 더 쥐어줄 수 있느냐를 따지고 있으니, 말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딘가 허전하다는 얘기다.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개개인 사이의 불평등과 그 금액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조화로운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

공동체주의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현대 사회의 지나친 개인주의에 대한 염려도 한몫을 한다. “불법을 저지르지만 않으면 더이상 남에게 빚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서로를 배려할 필요 없이 나만 잘 하면 된다. 내가 뭘 하든 간섭하지 마라”고 하는 현대의 개인주의 사조는 공동체주의자들 외에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비판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상식이 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자들은 “말세다, 말세” 한탄만 하지 않고 개인주의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나섰는데, <정의는 무엇인가>의 저자인 샌델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주의의 주범은 자유지상주의와 공평주의 등 흔히 “자유주의(liberalism)”로 통칭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정치사상들이다.

경제적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절대적 인권,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 기부했으니까 연말정산 때 세금 돌려받을 권리... 전국민이 각자 권리, 권리, 권리만 따지고 있으니 내 이기적인 경제활동이 우리 공동체의 화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가 내뱉는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꼴불견인지, 정부에서 돈 타서 쓰고 있다면 다른 납세자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남을 도울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등등... 정작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준 공동체는 뒷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더라도 전통적인 공동체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시기에 인기를 끌기

시작한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등과 더불어, 공동체주의는 (국가 공동체를 포함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공동체들을 현대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사조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동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지금과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으니, 개인의 권리만 찾지 말고 공동체의 덕을 구하라는 얘기다.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묵묵히 자기 역할을 수행해야 사회가 잘 돌아간다고 주장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말을 빌려, 공동체주의자들은 선택의 자유를 외치기 전에 각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와 자격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부와 권력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나 “가장 가난한 사람의 이익”과 같은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부와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고의 플루트를 최고의 연주자에게 주어야 하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그럴 경우 최고의 음악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음악을 듣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유는 다르다... (중략) 그 분배 방식이 잘 연주되어야 한다는 플루트의 존재 이유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플루트의 목적은 뛰어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목적을 가장 훌륭히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플루트를 가져야 한다.

— <정의란 무엇인가?> p. 264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철학자들은 흔히 목적론적인(teleological) 사상이라고 일컫는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논의할 때, 만물이 만들어진 목적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목적론적인 정치철학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는 일정한 역할과 책임이 있고, 사회가 조화롭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주의가 말하는 정의는 누가 얼마나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부자는 부자답게 돈을 잘 사용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답게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군인은 군인답게 나라를 잘 지켜야 하고,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를 잘 해야 하고, 범죄자는 범죄자답게 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에서도 이런 패턴을 자주 엿볼 수 있다. 공평주의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주의 역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이런 상식적 어필 때문이다.

공동체주의의 한계, 또는 “샌델이 알려주지 않는 것들”

샌델의 책을 여기까지 읽다 보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 사람들은 공동체주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의 피도 눈물도 양심도 없는 개인주의적 사조에 염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공동체와 사람의 본분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 철학이 우리 정서에 잘 맞아서이기도 할 것이다. 아무튼 요즘 우리 나라에서 공동체주의라고 하면 상당히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것 같다. 샌델이 푸근한 공동체주의자가 아니라 냉정한 자유주의자였다면 과연 그의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을까? (미국에서는 우리 나

라의 1/10도 팔리지 않았다.)

그러나 공동체주의 정치사상이 처음 고개를 들기 시작한 지도 30년이 지났고, 그 사이 정치 학자들과 철학자들은 공동체주의의 약점을 상당 부분 파악해 두었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염 려되고 공동체주의에 귀가 솔깃해진다면 “왜 공동체주의가 필요한가?” 뿐 아니라 “공동체주의를 받아들일 경우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꼭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의 패턴에 바탕을 둔 이론이라도 지나치게 한 쪽을 강조하 고 경직된 이론으로 만들어 버리면 부작용을 낳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첫째, 공동체주의 정치사상을 옹호하는 세상의 정치학자, 철학자들 중 어떤 공동체가 건전한 공동체이고, 건전한 공동체와 불건전한 공동체의 차이가 무엇이며, 건전한 공동체를 세우고 유 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많은 독자들이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천주교 신자인 매킨타이어와 테일 러가 전통적인 천주교의 덕목들을 가끔 언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다들 쭈뼛거리기만 하고 명확 한 대답이 없다. 그 결과,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가치를 운운하면서도 과연 어떤 공동체가 바 람직한 공동체인지, 어떻게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전혀 설명해 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공동체주의 저서를 읽어 보면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전통과 관습을 아 무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주장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다. 샌텔의 책도 예외는 아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후반부로 갈수록 미국의 전통과 관습을 낭만화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공 동체주의자들의 저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렸을 때 경험한 20세기 중반의 미국 사회에 대한 향수가 짙게 느껴진다. 요즘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막연히 옛날 것을 그리워하고, 옛날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였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공동체주의자들이 그리워하는 과거의 미국 사회가 과연 얼마나 탁월했는지는 의문이 든다.

공동체주의자들이 아버지처럼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이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 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물론 샌텔은 현대의 교양인이므로 노예 제도를 되살리 자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변호하는 대목을 보면 과연 그의 이론을 21세 기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원칙적으로는... (중략) 노예로 잘 살 사람이 누구이고, 노예 노릇에 화가 나 도망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물리적 힘을 동원해 다뤄야 한다면 그는 노예에 맞지 않 는 사람임에 분명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강요는 부당함의 증거다... (중략) 누군가에게 무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천성이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본성에 맞는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는 무력이 필요치 않다... (중략) 노예제는 천성에 맞지 않아서 부당하다. 즉 강요는 부당함의 증상이지, 그 이유가 아니다.

— <정의란 무엇인가?> p. 283

대부분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체질에 맞지 않아서일 뿐이고, 만약 정말 로 노예근성을 타고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노예로 삼아도 된다는 말이다. 흑인은 백인보

다 열등하기 때문에 당연히 노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19세기 미국 귀족들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당시에도 백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난 흑인들의 지능이 백인보다 떨어진다는, 지극히 당연한 연구 결과를 자랑스럽게 인용하곤 했다.

샌델과 함께 공동체주의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윌찌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정의로운 전통 사회의 한 예라고 평가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쯤 되면 단순히 과거에 대한 향수를 넘어서서 코미디에 근접한다. 싱가포르의 리관유 총리도 공동체주의를 적극 옹호하는 발언으로 90년대 초 정치철학계에 파장을 일으켰지만, 리관유가 수십 년간 독재해 온 싱가포르의 정치적 상황이 알려지면서 조용히 무시당하고 말았다.²⁾ 리관유가 야당 지도자들을 탄압하는 데 즐겨 사용한 방법은 그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파산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상실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자격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자격과 역할을 부여하고 박탈할 권한이 타인에게 있다면 악용의 소지가 크다.

한국에서 공동체주의를 받아들여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한다. 당연히 없어야 할 인습과 편견들을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미화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사회적 풍습은 언제나 조금씩 바뀌는 법인데, 1800년대 중반에 얼어붙은 유교식 “전통”, 지난 세대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미풍양속”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일은 없는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사회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그런 다양성을 통한 발전의 기회를 빼앗는 일은 없는가?

둘째, 공동체주의와 전체주의 또는 파시즘을 혼동할 위험이 있다.

“국가가 너에게 무엇을 해 줄지 묻지 말고, 네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 물어라”는 케네디 대통령의 명언은 정부에서 내주는 혜택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무리가 없지만, 개인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국가를 위해서라고 해석한다면 히틀러와 무솔리니, 모택동과 스탈린, 김일성, 리관유 등의 전체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최근 중국과 아랍권의 몇몇 독재 국가들이 자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동체주의를 들먹이고, 공동체주의자들의 자유주의 비판에 편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이기심을 꺾는 것과, 중국 공산당의 장기 집권을 위해 인권을 포기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동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건전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간섭을 주장하는 정치사상으로서의 공동체주의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가 공동체의 일상에 간섭하는 것은 개인주의보다 훨씬 무서운 적일지도 모른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현대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권리들 중, 웬만하면 행사하지 않는 것이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성인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울 권리, 도박할 권리, 양다리 걸치거나 바람피울 권리 (간통죄 제외?), 사소하게 다툰 것을 고소하고 맞고소해서 법정에서 싸우다가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이가 되어버릴 권리, 자연 재해

2) 리관유는 서양의 자유주의 세계관을 동양에 강요하지 말라며 싱가포르식 독재를 옹호하는 논문을 서양 학술지에 게재하기까지 했다. 학술지 발행인이 그의 논문에 정말로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게재를 허락했는지 아니면 외국 정상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묵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의 논지를 반박하는 글을 동일한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동양을 대변하려는 리관유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때문에 마실 물이 부족한 곳에서 생수 값을 몇 배로 올려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잔인하고 퇴폐적인 소설, 게임, 영화 등을 만들어 팔 권리 등등... 그러나 그러한 제한이 어떤 형태를 띠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다수의 공동체주의자들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권리를 제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권리를 잘못 행사하는 사람들을 당장 다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은 일단 봐주고 사회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퇴폐 유흥업소, 도박장, 컴퓨터 게임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도 있고, 대대적인 공익 캠페인과 교육 개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바람직한 행동을 권장하는 방법도 있고, 정부의 간섭 없이 기업이나 시민 단체 등이 각자의 자리에서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그 중 한 가지만 해야 한다는 법도 없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동체주의자들은 너무 급하게 국가의 간섭을 요청하곤 한다. 이것은 애초에 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 공평주의)에 대항해서 나온 사상인 탓이 크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경제 정책, 국가의 조세 정책, 국가의 복지 정책, 국가가 보장하는 각종 권리 등, 우리가 흔히 “정치”라고 생각하는 영역의 주제들을 많이 다루는데,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 공동체주의이다 보니 또다시 제일 먼저 국가를 들먹이고, 심하면 국가와 공동체를 동일시하기까지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공동체가 건전한 공동체인지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을 만들어내다 보니, 공동체의 덕목을 어떻게 권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선불리 국가의 간섭을 요청하면 “국가 공동체”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전체주의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 제한은 극단적인 형태를 띤다. 공동체주의도 자칫하면 이렇게 대의명분을 핑계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천부인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넷째, 공동체주의와 공평주의가 공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자신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상 속의 인물이 등장하는 롤즈의 시나리오가 반(反)공동체적, 개인주의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샌델의 주장에는 역지가 있다. 상상 속의 시나리오는 어려운 철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상상 속의 인물이 자신의 인종을 알지 못한 채 정의를 고민한다는 설정은 인종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백인들 고유의 전통도 흑인들 고유의 문화도 모두 철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성을 알지 못한다는 설정도 마찬가지이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적인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서로 때문에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성 차별 없는 세상이 바로 정의로운 세상이라는 뜻이다.

공평주의가 공동체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아쉽다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공동체의 가치를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에 대해 롤즈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평주의자들은 아무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정치철학자 윌 김리카가 지적했듯이, 공동체를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평주의가 공동체의 가치에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회자유주의자들은 헌법과 경제 구조 등 정의의 제도적인 면에 집중했고 공동체주의자들은 정의의 사회적, 심리적 면을 자세히 살폈으므로 관심사가 달랐을 뿐이다.

따라서 양쪽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도 있다! 1980년대의 공동체주의 논란을 일시에 잠재워버린 윌 김리카(Will Kymlicka)의 중재안에 따르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는 여러 민족과 문화가 섞여 살기 때문에 특정한 공동체의 가치들을 제도화한다면 차별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국가가 간섭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공동체 내에서 자발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낫다. 국가와 시민 사회가 역할을 분담하자는 말이다. (최근 한국도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다 보니 김리카의 중재안을 배우기 위해 캐나다를 찾는 학생들이 부쩍 늘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공동체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자유지상주의와 공평주의가 강조하는 선택과 인권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필요를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공리주의와 같은 오류를 범한다. 결과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이다.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을 내세우는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주의와 함께 개인의 인권까지 내다버리는 오류를 종종 범한다. 앞에 설명했듯이, 자유지상주의와 공평주의와 인권이라는 개념을 형성한 것은 왕이나 독재자뿐 아니라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도 막으려는 생각에서였다. 만약 다문화 사회에서 다수 공동체가 자기들의 가치대로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면, 소수의 인권은 짓밟힐 수밖에 없다. 다수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꼭 필요한 개혁을 부르짖는 소수가 있다면 공동체의 전통이 뭐라고 말하든 그들의 인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롤스가 불평등에 명백한 한계를 두었듯이, 공동체주의자들도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데 한계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안타깝게도 공동체주의자들은 30년 이상 지난 오늘날에도 공동체와 인권의 올바른 균형에 대해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소 공평주의 쪽에 치우치기는 했어도, 김리카의 또다른 제안에 귀가 솔깃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공동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인권을 제한할 권리는 없다.”

기독교인으로서 더 생각해 볼 것들

위의 내용은 필자가 비기독교인들에게 강의한 내용이라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논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위에서 다룬 정치철학 이론들의 장단점 외에도 몇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공동체주의와 공평주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김리카의 중재안도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양한 문화가 섞여 사는 사회에서 각각의 문화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일은 국가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하자는 논리는 문화 공동체뿐 아니라 종교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평주의자들은 낙태 반대, 안락사 반대, 동성 결혼 반대 등 기독교계의 입장을 국가와는 무관한 것으로 치부한다. 이에 따라 서양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낙태가 무제한 허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락사도 허용되며, 최근에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적은 지역부터 동성 결혼도 합법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물론 이런 정책들이 100%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낙태를 너무 심하게 금지할 경우 뒷골목에서 불법으로 낙태 수술을 하다가 산모까지 사망하는 문제가 급증하곤 한다.) 문제는 종교를 일종의 문화로, 기독교 공동체도 일종의 클럽 정도로 보는 시각 때문에 성경에 기초한 원칙들이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서 정부의 종교색을 지운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선단체는 목사가 운영하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도 한 번 할 수 없고, 미국의 정부 기관 앞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그리스도 (Christ)”라는 말이 포함되는 “메리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라는 문구도 쓸 수 없고 - 요즘은 “즐거운 명절 되세요 (Happy Holiday)”라는 말이 유행인데, 영어의 “명절 (holiday)”이라는 단어가 원래 “거룩한 날 (holy day)”이라는 뜻인 것은 알고들 그러는지? - 프랑스 공립 학교의 학생은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 수립과 공동체의 가치가 모두 필요한데, 이 일을 국가와 시민 사회가 분담하자는 제안은 좋았으나 각각의 역할 구분이 너무 경직화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규제를 반드시 정부가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떤 영역에서 정부는 무조건 손을 떼라고 고집하는 것 역시 문제이다.

그러면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덕목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학자들이 서로의 이론을 어떻게 반박했는지를 소개했지만, 여기서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의 예를 잠깐 들어 보려고 한다.

사도행전 10:9-22에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 때까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던 각종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는 사건이 등장한다. 세상의 모든 동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 부정한 고기란 없고, 따라서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부정한 사람이란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교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는 종종 이방인들의 제사상에 올랐고 제사 후 남은 고기가 시장에서 거래되기까지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장문의 편지를 쓴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로마서 14:15, 20, 21)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13)

바울 사도의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공동체 안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고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신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면서도 초대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절대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거나, “고기를 먹는 사

랍은 교회에서 추방하라”거나, “고기를 먹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엄포를 놓지 않는다는 점이 다. 초대교회 성도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권리”라는 말을 무려 6번이나 사용한다. (개역성경에서는 “권”이라고 한다.) 데살로니가후서 3:9의 비슷한 구절까지 합하면, 개역개정 성경에 총 14번 등장하는 “권리”라는 말의 무려 절반을 이 주제에 쏟아부은 셈이다. 누가 보면 바울 사도는 대단한 자유주의자가 아닐 수 없다. 권리를 그렇게 강조하다니! 사도행전에서 로마 시민권을 들먹이며 로마에서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받겠다고 하는 장면을 보면, 바울 사도는 필요할 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망설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에 한해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바울은 권리를 가진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가르쳐 준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4-6, 12, 18)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권리를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고린도전서 10:23)라는 말은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자유가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만큼만 쓰고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을 때는 묻어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바람직한 권리 행사의 자세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확” 못 하게 만들어 버리면 참 편하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들은 서둘러 국가를 불러와서 불쌍사나운 권리들을 규제해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렇게 공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만약 바울 사도가 무엇이든 마음대로 먹을 권리를 부정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의 리스트를 꼼꼼하게 작성해 보냈다면, 과연 로마 제국과 그 너머의 많은 민족들이 속히 복음을 듣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

혹자는 이것이 너무 순진한 제안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자유에 맡겨 놓고 절제만 기대하다가 공동체가 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어쩌면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건전한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공동체를 옹호하려고만 하는 첫 번째 오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만약 어떤 공동체에서 누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줄줄이 실족한다면 그 공동체는 지금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덕이 되지 않는 개인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만큼 공동체의 건강 역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곤란하다.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누누이 강조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주인과 종 사이의 상호 순종 관계를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에게 절제를 부탁함과 동시에, 공동체가 개인에게 충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개인이 조금만 반항해도 공동체의 존폐가 흔들린다면 그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는 애초에 보존할 가치가 별로 없는 악습이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데 거의 관심이 없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는 공동체라면 더 큰 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당장 100년 전만 해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면 사회가 풍비박산날 거라고 걱정하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자.

공동체주의자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전한 공동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기독교인들은 대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한낱 전통과 문화보다 위에 있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둘 다 좋은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 억압과 패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도 있다. 어느 한 쪽을 지나치게 낭만화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고, 양쪽 모두 이웃에게 도움이 되도록 쓰자.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 시대를 주름잡던 정치철학 이론이라 해도 결국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에서 특정한 패턴을 찾아 체계화한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이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거기에 바탕을 둔 정치철학 이론들도 종종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는 오류를 범한다. 공리주의는 결과의 중요성, 자유지상주의는 선택의 중요성, 공평주의는 개인의 중요성, 공동체주의는 집단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끝내 어느 하나도 정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일관성있게 표현해 주지는 못하고, 더 나아가 현실에 적용하면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키기까지 한다. 아니, 어쩌면 정의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도 애초부터 일관성이 없었는지 모른다.

모든 정치철학은 반쪽짜리 진리이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어느 한 가지 이론이 더 인기를 끌기는 하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중 어느 하나에도 휩쓸려가 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들이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거기에 바탕을 둔 정치철학 이론들도 하나같이 허점 투성이기 때문이다.

정치철학 이론들은 돋보기의 역할을 한다. 특정한 생각의 패턴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는지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체계화시켜 놓으면 장단점이 훨씬 눈에 잘 띄는 것이다. 돋보기를 한 번씩 들여다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가끔은 생각을 멈추고 내가 어떤 생각의 패턴을 따르고 있는지, 이런 패턴의 한계와 장단점은 무엇인지 따져볼 수 있으면 좋겠다.

철학은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어떻게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미 절반은 대답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참고문헌

일반:

Michael Sandel, *Justice* (2009)

공리주의:

Jeremy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1789)

John Stuart Mill, *On Liberty* (1859)

John Stuart Mill, *Utilitarianism* (1863)

자유지상주의: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89)

Friedrich von Hayek, *The Road to Serfdom* (1944)

Milton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1962)

Robert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1974)

사회자유주의/공평주의: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1971)

Ronald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1977)

Ronald Dworkin, *A Matter of Principle* (1985)

Amartya Sen, *Inequality Reexamined* (1992)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1993)

공동체주의: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1981)

Michael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982)

Michael Walzer, *Spheres of Justice* (1983)

Charles Taylor, *Sources of the Self* (1989)

중재안:

Will Kymlicka, "Liberal Individualism and Liberal Neutrality" (1989)

Will Kymlicka, *Multicultural Citizenship* (1995)